

# 세계화와 한국농업의 기회

DDA이후 WTO차기협상 난항 예측, 미래 교역전략 '양자간 FTA'에 들 듯 소비자 신뢰로 '가격경쟁력' 확보·농가소득안정 도모 위해 정부 역량 집중해야

## WTO의 도전과 전망

한국 농업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화이고, 세계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WTO와 FTA라는 두개의 수레바퀴이다. 따라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논하려면 이 두 수레바퀴의 움직임을 검토해야 한다.

WTO는 농산물 교역의 완전 자유화, 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보조금의 철폐를 그 비전으로 하고 있다. 그 비전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성공적 타결로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UR)는 모든 국경보호를 관세화로 통일하는 시장접근의 개혁, 농업생산을 왜곡하는 국내보조금의 감축, 그리고 무역을 왜곡하는 수출보조금의 감축에 합의하여 1세기 동안 진행된 보호주의의 물결은 일거에 시장주의로 반전되었다. UR이 세계농업을 시장지배의 원

칙에 따라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 DDA는 이 원칙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이의 성공 여부는 WTO의 이상과 비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DDA는 모든 국가가 좌초시킬 수 없는 세계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성공적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세기 보호주의의 실패를 성찰한 토대 위에서 그 필요성을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DDA 협상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00% 이상의 고관세로 농산물을 보호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고관세 품목의 관세 감축률이 매우 높게 설정될 뿐만 아니라 관세 상한이 설정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금은 모든 보조

의 총액, 감축대상 보조(AMS)의 총액, 품목별 감축대상 보조액,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총액 별로 상한과 감축률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만큼 감축 폭이 커지고 지불 형태나 대상 품목을 변경하는 신축성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기회와 틈새가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충격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각 국에 매우 중요한 몇 개 품목, 이른바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축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과 그 밖에 몇 개 품목의 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제한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국내보조도 농업 총생산액의 5% 범위 내에서 새롭게 인정하게 되어 국내 직접지불정책에도 여유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회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DDA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라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했고 브라질, 인도, 이집트 등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DDA의 충격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보편적이지만 반드시 그 가능성이 낮지만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는 것에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개도국이 되면 손해를 볼 나라들의 이익의 제

기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도국 유지란 한국 경제사회의 포괄적 발전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관

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낮추는 두 개의 선택, 즉 ‘빠른 감축의 길’과 ‘느린 감축의 길’ 중 ‘느린 감축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매우 단순한 의미이다. 100~200년이상 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어 농업구조조정을 이룩하여온 나라들에 비해 이제 산업화의 역사가 40년 밖에 안된 한국이 농업부문에 대해서만 ‘느린 감축의 길’을 선택하여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WTO의 논리에 전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동남아세아나 아프리카의 국가와 같은 개도국인가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이 비판은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 끝에 소말리아와 같은 국가가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고, 한국은 소말리아와 같지 않지만 미국과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산업화 역사가 150여년이 넘은 미국은 UR때부터 ‘빠른 감축의 길’을 선택했고, 한국이 가령 2015년경부터 ‘빠른 감축의 길’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후발 개도국들은 그 후 한참 뒤까지 ‘느린 감축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각국의 발전 수준에 따라 ‘빠른 감축의



이 정 환  
GS&I인스티튜트 원장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은 반드시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해 높은 관세로 국내 농업을 보호한 결과 국내 시장 가격이 높아진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선진 농가는 물론 전국 평균 농가의 경영비는 수입 농산물 가격보다 결코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자연스런 구조 개선으로 가격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길 로의 전환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일 뿐 한국이 후발 개도국들과 같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해 당사국들이 격렬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상대국에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여 목소리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카드를 예비해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내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 FTA의 도전과 틈새

WTO는 기본적으로 회원국 모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화의 규범이 만들어지므로 모든 결정은 매우 지루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DDA에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WTO의 다자통상협정이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세계시장 전략에 도리어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DDA 이후 WTO의 차기 협상은 상당히 멀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앞으로는 각국의 교역 전략이 양자간 FTA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5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208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180여개가 발효되고 있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70여개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7개, EU가 35개, 칠레가 41개의 FTA를 체결하여 FTA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전 세계로 상품, 서비스, 문화 시장을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 능동적으로 글로벌화의 흐름을 활용하려는 “선진통상국가





전략"이 국가의 핵심 발전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여 20여 개국에 가까운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어떠한 협상도 우리가 당면한 조건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FTA는 상당한 규모의 민감 농산물에 대해 예외 혹은 유예 등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가 맺은 한·칠레 FTA협정은 물론 앞으로 맺을 FTA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세가 100%를 넘는 농산물이 30여개나 되지만 그 중 고추, 마늘, 양파 등 몇 개 품목과 관세화가 안 된 쌀을 제외하면 나머지 고율 관세품목의 부가가치 규모는 2,000억원 미만으로 농업 총부가가치의 1%를 넘지 못한다. 또한 수요는 많은 데 국내 생산이 거의 안 되는 품목(사료용 옥수수, 착유용 대두, 매니옥 등등)은 양허관세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수입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세 감축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 한국농업의 활로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면 DDA가 타결되고 FTA가 확대되더라도 농업부문의 영향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신축성은 확보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그 정도의 신축성을 확보하면 수입농산물

과 경쟁하며 우리나라 농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은 반드시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해 높은 관세로 국내 농업을 보호한 결과 국내 시장 가격이 높아진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선진 농가는 물론 전국 평균 농가의 경영비는 수입 농산물 가격보다 결코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자연스런 구조개선으로 가격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또한 품질과 안전성에 따라 몇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보편적이므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만 확보한다면 가격 경쟁력의 부족을 극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 나아가 경쟁력은 소비자 신뢰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대량구매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산지가 조직화되어 품질과 안전성의 기준을 철저히 유지하고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하며, 그 성공 여부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경쟁력 확보 노력만으로 농가의 소득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매우 두터운 농가 소득안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